

위기 이전 한국자본주의의 난장적 특질

이영훈

I. 기본시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제로서 시장경제는 물적 및 지적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제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와 기구를 토대로 작용한다. 그런데 나라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같지 않고 나아가 전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비중이 다양한 것은 그 토대를 이루는 제도·기구의 형태와 원리가 나라마다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에 깊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문화적 전통에는 우선 한 나라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당시의 경제발전 수준이 포함된다. 보다 근본적이며 경로의존적인 요인으로서는 생태형(eco-type), 가족형, 사회형, 종교형 등,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유형과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마다 제도의 형태와 원리가 같지 않은 것은 그것의 이식과 토착의 과정을 규정한 이 같은 문화적 제요인의 차이 때문이다.

생태형은 온대와 열대, 평야와 삼림, 수전과 한전 등과 같은 자연적인 기후 및 환경의 차이를 말한다. 가령 수전과 한전의 두 농업지대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경로의 차이는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수준과 근대화 과정을 나눈 가장 근저적인 요인이었다. 가족형은 핵가족·직계가족·공동체가족 등의 가족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친족조직의 차이를 말한다. 예컨대 앵글로색슨의 핵가족은 개인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시장경제의 덕목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의 공동체가족보다 유리하였다. 노동시장이나 사회적 분업으로서 농촌공업이 발전하는 데도 핵가족이 공동체가족보다 양호한 조건을 제공한다. 사회형은 사회의 통합을 위한 공공기능의 공급 주체가 부족인가 공동체인가, 아니면 관료제인가 등의 차이를 말한다. 시장경제를 위한 선진적인 제도나 기구는 관료제보다 촌락이나 상공인의 자율적인 공동체가 발달한 사회에서 조기적으로 성숙하였다. 종교형은 영리추구에 우호적인가 여부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의 방향에 관한 한 사회의 가치체계의 규정적 작용을 말한다. 주지하듯이 이슬람은 이자 추구를 아직도 금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 사회에서 성립한 금융시장은 서유럽의 그것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시각에서 1950년대까지 한국인의 대다수를 포섭한 전통 소농사회를 관찰하면, 정기시에서 전개된 생계형 상업과 관료제를 그 경제적 및 사회적 통합 형태로 하였다는 비교사적 특질을 지적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이

정부주도형으로 수행되었던 것은 이 같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이다. 아울러 정부에 의한 주요 자원의 배분이 더 이상 효율적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의 규모가 커진 이후 그 시장경제가 난장으로서의 특질을 두드러지게 노정하였던 것도 이 같은 역사적 문화적 제요인에 의해서이다. 1997년 경제위기의 발생도 이 같은 시각에서 그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인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II. 전통사회의 조직적 특징

미국·독일·일본 등에 비해 한국이 저신뢰의 사회라는 후쿠야마(Fukuyama)의 지적은 당초 한국인들로부터 그리 우호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저작이 나온 지 얼마 뒤에 터진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그가 옳았음을 입증한 셈이었고, 이후 그의 지적에 이의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한국인을 찾아보기는 힘들게 되었다. 짐작컨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비전문가인 후쿠야마가 그 같이 정곡을 찌르는 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헨더슨(Henderson)의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다. 헨더슨이 바라본 한국의 전통사회는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로 구성된 일종의 ‘대중사회’(mass society)로서, 일찍이 뒤르켐(Durkheim)이 묘사한 바 있는 환형동물과도 같은 간단하며 유치한 구조이다. 그러한 가운데 서울과 그 중앙권력은 마치 ‘소용돌이’(vortex)와도 같이 대중사회를 통합하는 유일한 구심력이었다. 헨더슨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들의 전통사회가 촌락과 친족을 단위로 한 공동체적 미덕과 수준 높은 자치능력으로 가득 차 있음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확고한 믿음이 그의 저작에 대한 차라리 의도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철저한 무관심을 유도하였던 셈이다.

과연 한국의 전통사회는 공동체적인가? 필자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힘들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인 검토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촌락과 그의 洞稷 조직이다. 우선 쉽사리 지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 말단 행정단위로 성립한 17세기후반이래 19세기말까지 동리는 지속적인 분열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경기도 廣州府 慶安面의 경우, 동리의 수가 1757년에 8개였다가 1790년에 11개로, 나아가 1912년까지 19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分洞의 전국적 양상을 보면, 1790년에 총 39,465개였던 동리가 20세기 초에 이르러 1.6배나 많은 63,845개로 증가해 있었다.

분동은 동민 상호간의 신분격차와 그에 따른 여러 수준의 갈등이 기본 요인이었다. 특히 동리민에게 부과된 賦稅의 배분을 둘러싼 班常간의 알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동리민의 신분이 반상의 대립을 특징으로 하였음은 그들 모두가 1년에 한 두

번씩 모이는 洞會의 양상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18세기중반 安鼎福이 지은 廣州府 慶安面 2리의 동계 규약을 보면, 주민들은 그의 신분에 따라 동회에서의 자리배치가 堂-階-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한 신분갈등이 잠복하였기에 18~19세기의 동리는 지속적으로 분동을 지향하는 유동적 상황에 있었다. 18~19세기의 동리가 굳건한 결속의 공동체라는 이미지는 몇몇 유명한 班村으로부터 도출되어 아무런 매개없이 전 촌락으로 일반화되었던 데에 그 기원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반촌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洞稷=洞約은 그 사회조직적 특질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가. 동계는 孝悌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적 사회윤리로 동리민을 馴致시키기 위한, 그렇게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양반신분의 지분연합으로서 결사체임을 그 본질로 하였다.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 동계라 하더라도 그 기본 기능은 동리민의 인간 체관계를 반상의 신분질서로 규율하거나 부모의 장례를 당한 동리민에 대한 부조를 넘지 않음이 보통이었다. 동리민의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불가결한 수리·산림·교육 등의 공공재는 별도의 단일기능적인 泐稷·松稷·書堂稷 등에 의해 공급되었다. 그러한 시각에서 18~19세기의 동리는 여러 단일기능적 결사체로서 계들의 多層異心的 중첩으로 그 구조적 특질이 지적될 수 있다.

族稷은 여러 동리의 양반 친족집단의 연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활발성이나 공공성은 동계의 그것을 능가하거나 아예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하였다. 가장 튼튼한 혈연으로 맺어졌기에 족계야말로 종합기능적인 공동체였다는 주장이 쉽사리 성립할 듯하지만, 그 역시 단일기능적인 결사체임에 별다름이 없었다. 예컨대 崔在錫 교수가 일찍이 답사하였던 경남 咸陽의 어느 친족집단은 그토록 많은 문중재산으로부터의 수입을 아낌없이 조상제사와 爲先사업에 투입하였지만, 대조적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족원에 대한 공동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18~19세기 동리 구조의 異心性과 관련해서는 독특하게도 동리 주변의 삼림이 동리의 공동소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들 수 있다. 삼림은 많은 경우 동리의 유력 친족집단의 私養山이었다. 보다 정확히 말해 친족집단은 大宗에서 小宗으로 끊임없이 분화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宗家の 사실상의 사유림이었다고나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산림의 분할을 둘러싼 친족집단 내부의 갈등은 어떠하였으며, 아예 그 이용을 차단 당한 촌락의 하민들이 받은 서러움과 느낀 분노는 또한 어떠하였던가. 이로 인해 18~19세기 농촌사회가 분열하고 갈등했던 양상은 산림 이용에 관한 산더미처럼 많은 소송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확실히 18~19세기 농촌사회의 인간들을 ‘쟁반 위의 모래알’과 같은 ‘대중사회’로 비정함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견고한 공동체적 결속이 바탕을 이루는 공

동체사회라는 대안적 진단도 곤란하다. 그것은 조선 고유의 계 형태로 맺어진 緣網(network)의 사회였다. 즉히 ‘수십만’은 되었을 각양각종의 계가 농촌사회의 인간 체관계를 촘촘히 엮은 가운데 비교적 잘 조직된 주민집단과 자치질서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鈴木榮太郎이 관찰한 바와 같은, “개인의 位座가 현저히 고정되고 개인의 위자가 엄격히 지켜지는 의미에서 개인주의적”인 농촌사회의 분위기도 다른 한편의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러한 사회조직의 이중적 특질은 모든 계는 계일진대 단일한 목적과 기능을 위한 결사체라는 속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조직은 외부의 상황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자랑으로 하지만, 동시에 이해관계의 내부적 분열을 조정할 능력이 취약한 데 따른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공동체와 연망을 구분할 기준이 연구자에 따라 애매하다는 문제점은 비교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제국의 촌락공동체에서 관찰되는 노동의 호혜적 교환이나 수확물의 재분배체제를 18~19세기 조선의 촌락사회에서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공동체적 호수와 재분배가, 還穀制로 상징되는 바,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었다는 비교사적 특질을 지적할 수 있다. 촌락사회 내에서 개별 가족의 생계는, 놀부에게서 쫓겨난 흥부처럼,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영위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했던 한 18~19세기 조선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 사회였다.

어떠한 형태의 호혜나 재분배 체제에 뒷받침되지 않으면서도 개별 가족의 강한 공동체적 결속을 과시한 사례로서 근세일본의 촌락을 들 수 있다. 근세일본의 촌락은 주거·경지·산림·하천·神社 등의 구조적 결합으로서 주민의 일상적 재생산에 요구되는 제반 공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동체였다. 촌락은 주민의 생득적인 귀속대상이자 개별 주민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의 가부장적 권위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촌락공동체가 17~18세기에 걸쳐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村請制 방식의 年貢 수취가 말하듯이, 국가에 의한 사회의 일종의 군사적인 편성에 그 기원이 있었다. 대조적으로 조선왕조의 경우는 18~19세기를 거치면서 軍役이나 還穀의 수취에서 면·리를 단위로 한 공동체적 수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긴 하였으나, 국가재정의 기간을 이룬 結稅의 수취에 관한 한, 개별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직접적 지배체제는 끝까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조선 소농사회가 19세기의 위기과정에서 그 사회조직적 특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었던가는 앞으로의 중대한 연구과제이다. 위기에 대한 사회의 자율적인 방어능력이 감퇴하고 있었음은 지방관에 접수된 소송의 빈발을 통해 관찰되고 있다. 예컨대 1790년 호수 8,214호의 전라도 靈巖郡에 1838~1839년의 3개월간 월평균 200건(연평균 2,400건)의 소장이 접수되었다. 1790년 호수 12,691호의 영광군의 경우는 1870~1872년의 26개월간 월평균 254건(연평균 3,408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와 대비

될 중국에서의 好訟의 풍조는 乾隆년간 호수 23,366호인 湖南省 寧遠縣에서 연간 9,600여건, 호수 77,750호인 湘鄉縣에서 연간 14,400~19,200건의 규모였다. 호당 소송의 빈도를 계산하면 양국이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19세기의 위기과정에서 조선 소농사회는 중국형의 저신뢰 사회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 소농사회가 20세기 전반 식민지기에 겪었던 재편과 변용의 기본 효과에 대해 말하자면, 각종 계 형태로 영위되던 구래의 자치질서가 일제가 강압적으로 포진한 관료제와 관변 조합으로 흡수되고 말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가 그 자율성을 상실하고 국가기구에 매몰됨에 따라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라는 현대한국의 기본 틀이 식민지기에 형성되었다. 그 결과 1950년대에 사회학자들이 농촌을 답사하였을 때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농민단체는 보통 족계로 맺어진 친족집단과 전국적 정당조직 등의 관변 단체를 제외한다면, 사친회·교회·4H클럽 등이 활동하고 있는 정도로 지극히 빈약한 실정이었다. 헨더슨이 실제로 관찰하였던 것은 이 같이 정부와 개인 사이에 자율적인 중간단체가 결여된 1950년대의 농촌사회였다. 그의 대중사회론은 1950년대에 관한 한 꽤나 그럴듯한 설명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이 파악한 전국 34,665개 마을에서 내부 리더쉽과 조직이 결여된 '기초마을'은 18,415개로서 절반을 초과하였으며, 그것들이 후진적인 '자조마을'은 13,943개(41%), 강한 리더쉽과 조직으로써 광범위한 자조계획을 수행 중인 '자립마을'은 2,307개(6%)에 불과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마을을 사실상 법인으로 대우함으로써 일본형의 공동체사회를 지향하였으나 실제로 마을에서 활동한 새마을 조기축구회 등 10종이 넘는 각종 자치기구는 그 본질에 있어서 여전히 관변 단체로서의 그 본질을 불식하지 못하였다.

Ⅲ. 농촌 장시

18세기이래 농촌 소농사회를 경제적으로 통합한 것은 대체로 인구 1.5만과 반경 6~7km의 지역권에 5일마다 열리는 場市였다. 장시는 1770년대에 전국적으로 1,062기의 피크에 도달했다가 이후 19세기말까지 정체 내지 감소의 양상을 보였다. 연후에 식민지기에 들어 1938년까지 1,458기로까지 확산하였다. 해방 후에도 남한에서 1950년의 826기에서 1975년의 1,047기로까지 줄곧 팽창하였다. 전근대적인 시장형태인 정기시가 그것이 성립한 17세기후반 이래 몇 차례의 경제적 위기 과정에서 정체 내지 감소한 기간을 제외하고선 3세기간 줄곧 확산 일로에 있었음은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쉽게 찾기 힘든 특이한 현상이다.

이 시장의 거래 양상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관찰은 식민지기에 문정창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에 지적된 몇 가지 특징적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상인

의 도량형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부정한 속임이 보편적이었다. 둘째 상인과 농민이 대개 무면식의 관계이어서 후일의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폭리를 추구하였다. 셋째 오전 중에는 농민의 출시품을 매집하지 않다가 오후의 귀로 시간에 압박하여 가격을 후리쳤다. 넷째 농민이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가격정보에 무지함을 이용하여 심한 경우 정상가격의 2~3배의 바가지를 씌웠다. 다섯째 출시하는 농민과 상인의 수가 일정치 않아 상품의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하였다. 이러한 시장 양상에 대해 문정창은 “無秩序, 無計劃, 無組織, 그에 따른 騷亂과 暴利”로 간략히 요약하고 있다. 이어 그는 조선에서 상설점포가 그리 발달하지 못한 여러 원인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필자에게 인상적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상업과 상인을 천시해 온 직업관이다. 그래서 조금만 돈을 벌면 상업으로부터 이탈하였던 것인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상인집단과 점포경영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또한 상인자본의 축적도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뒤이어 농촌 장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1975년에서야 이루어졌다. 그에 의하면 첫째, 상인의 자본규모는 평균 10~30만원으로 영세하였다. 여전히 이동상인이 고정 점포를 가진 상인보다 6 : 4로 많으며, 고정상인이라 해도 식민지기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장시를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둘째, 장시마다 ‘대개 1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市場繁榮會와 같은 상인단체가 조직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폐단을 염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장시 운영의 주체로 공인되지 못한 비공식적 단체였다. 기타 이전 조선시대나 식민지기로 소급하는 상인들의 전통적 조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상인들의 경력도 평균 15년에 머물렀다. 셋째, 장시에서의 거래는 상인과 농민의 對面去來가 일반적이지만 거래규모가 큰 곡물류의 경우 중개인이 개재하였다. 지역마다 또 물품마다 도량형이 달라 상인에 의한 농간이 쉽사리 가능하였다. 가령 곡물거래를 중개하는 되쟁이(升手)는 되를 쓰는 방법과 굴렁대를 굴리기에 따라 쪼승(깨기방법)이라도 0.8홉(8%)을 더 올리기 어렵지 않았으며, 관행적으로 1.8~2홉이 더 많은 高升(고봉방법)의 경우엔 3홉(30%)까지도 가능하였다.

필자는 농촌시장의 이 같은 난장 양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 상인의 상당수가 반농반상의 비전업적인 존재들이다. 가난한 농민들이 농한기에 도붓장수로 나서는 것은 1950년대까지 무척이나 일상적인 일이었다. 둘째 이들의 시장 진입에는 하등의 장벽이 없었다. 농촌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경쟁시장이었다. 셋째 거래의 규범을 세우고 질서를 규율한 상인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별로 예외적으로 존속한 조선시대 이래의 裸負商團은 그 본질에 있어서 유교적 윤리에 입각한 상호부조의 도덕단체였다. 이상과 같이 비전업적인 생계형의 상인들이 거래질서를 규율할 단체가 결여된 비조직된 시장에서 벌리는 무제한의 경쟁이 난장 양상을 초래하게 됨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1970년대 중반까지

줄곧 농촌 장시가 평면적으로 확산하였던 특이한 현상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시장거래의 양적 규모는 시장의 상설화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5배 내지 7배나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시장 이윤을 독점적으로 관리할 상인단체가 결여된 상태에서 소농사회로부터 배출된 생계형 상인의 수도 그 만큼 증가하였다면, 정기시가 상설화할 유인은 여전히 결여된 셈이었다.

Ⅲ. 도시 재래시장

식민지기 이래 근대적 도시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도시민의 일상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새로운 상품시장이 성립하였다. 이 신흥의 시장은 정기시의 연장인 朝夕市의 단계를 거친 다음 곧바로 상설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선 농촌 장시와 달리 도매와 소매라는 유통경로의 수직적인 분화가 뚜렷하였다. 그러한 중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신흥 도시 상설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음은 그 시장기구와 거래양상이 농촌의 난장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914년에 제정된 ‘시장규칙’ 이래 제도적으로 도시의 도매시장에서는 도시 당국에 의해 지정된 도매법인의 중개에 의해 입찰이나 경매의 방식으로 도매가격이 결정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 시장규칙은 오랫동안 1990년대까지 한갓 부질없는 문구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제도화된 시장 바깥에서 위탁상인에 의한 불법적인 유사도매시장이 번창하였다. 조선시대 客主의 전통을 잇고 있는 신흥 위탁상인들은 생산자와 수집상을 상대로 전대금을 살포하여 산지출하를 장악하였으며, 이에 도시로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대부분이 유사도매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 여기에 더하여 위탁상은 수집상의 애경사를 보살핌으로써 강력한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하였다. 통계가 알려진 1972년의 경우 서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어서 중앙도매시장의 비중은 15%에 불과하였다. 반면 위탁상들의 유사도매시장이 65%로서 압도적 비중을 점하였으며, 나머지 20%가 농협공판장에 의한 것이다.

위탁 도매업자와 수집상·생산자와의 장기적이며 고정적인 단골거래는 전통 농촌사회에서 익숙히 체결되어 온 수많은 계의 원리와 흡사하다. 계원들간의 두터운 신뢰관계는 거래비용을 절감함에 크게 효율적이며 아울러 시장의 위험성과 변동성에 대해서도 좋은 보험장치이다. 문제는 이 위탁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뢰관계가 위탁상 상호간의 규범과 그것을 집행하는 단체나 시장기구로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위탁상과의 개인적 연망이 결여된 상인이나 농민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 천만한 일이었다.

예컨대 서울의 청과물 도매시장은 1975년 서울역 뒤에서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속칭 그 ‘용산시장’이 얼마나 난장판이었는데 대해 홍천군 화촌면 장평1리

솔치고추 작목반원들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상인들은 주관을 뒤흔기며 자기들만이 아는 말로 흥정하였으며, 이에 가격 결정과정에서 농민들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처음 한 두 번의 소규모 출하에는 상인들이 후한 값을 쳐주어 농민을 유인한다. 이를 믿은 농민이 출하를 대규모로 늘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리친다. 다른 상인으로 거래선을 바꿀 수도 없는데, 미리 담합이 되어 있어 더 심하게 후리치기 때문이다. 그나마 판매대금을 받기 힘들어서 일주일이나 보름을 기다리기가 여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1976년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 安定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고 이어 1977년부터 추진하여 1985년에 완성한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개장은 한국 시장사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農安法은 지정도매인과 중매인·매매참가인으로 구성된 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 경매 또는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신속대량유통, 공정가격형성, 수급조절 등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함이 농안법의 기본 취지였다. 그렇지만 개장 후 5년간, 크게 보아 1990년대 전반까지 가락시장의 구조는 구 용산시장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가령 1989년 국회자료에 의하면 가락시장에 있어서 불법적 위탁거래의 비중은 청과가 54.5%, 채소가 55.6%, 패류가 53.2%나 되었다. 실제로는 속칭 記錄上場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비중이었다. 기록상장이란 지정도매인이 중매인과의 협의 하에 상장되거나 거래된 사실이 없는데도 상장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고함을 말한다. 이를 고려하면 위탁거래의 실제 비중은 8할을 초과하였다고 짐작된다.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통하여 도매가격이 공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농민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그렇게 선진적인 시장형태로 정비되었지만, 여타의 도시 도매시장은 오늘날까지도 난장으로 계속 남아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동대문시장은 중저가의 의류·패션시장으로서 세계 제일의 규모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27개 상가에 약 3만여 점포가 입주해 있는 이 시장의 하루 유통인구는 20~30만명, 연간 매출은 약 10조원, 보따리무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간 수출은 20~30억불에나 달한다. 이 시장의 최대의 경쟁력은 디자인-봉제-도매-소매와 연관된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이 시장 안이나 가까운 곳에 집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산업지리적 효과 덕분에 이 시장의 생산 속도와 비용은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저렴하다. 가령 1999년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상인이 동대문에 도착하여 디자인을 수배, 주문한지 이틀도 못되어 그 사람의 상점에 그 의류가 진열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동대문은 이 같은 경쟁력에 힘입어 번영을 누렸다. 영광스럽게 ‘동대문밸리’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도 그 언

저리이며, 그렇게 동대문은 위기의 한국경제가 모색할 대안적 국가경쟁력의 한 형태로 높이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필자의 관점에서 동대문은 그 시장조직적 특질에서 여전히 난장이며, 그 때문에 벌써부터 위기적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우선 1/10에 불과한 저임금에 유인되어 봉제라인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옮겨가 동대문이 자랑하던 신속일관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디자인·패션 부문에서라도 비교우위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모색해야 할 터인데, 실은 이 방면에 관한 한 동대문 스스로가 오랫동안 앓아온 고질병이 있다. 다른 상인이 어렵사리 개발한 디자인을 무단 복제하는 이른바 ‘짜퉁’이란 폐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 동대문 상인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실은 어느 듯 동대문 전체가 부동산시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조금 장사가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부동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 건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의 상가가 무려 15개나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주장으로는 현재의 27개 상가와 3만여 점포만으로도 이미 과잉이라는 것이다. 그건 앞으로의 일이지만, 현재 영업 중인 상가에서는 섬뜩하게도 ‘피값’이란 관행이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입점 상인들이 기한이 만료되어 상가 소유주와 재계약을 맺을 때 상가운영회에 자리값으로 지불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보통 운영회라는 것이 조직폭력배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거절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게 동대문의 경쟁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높은 임대료와 ‘피값’으로 부동산업자와 조폭의 소득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대문 의류시장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현재의 어려움은 둘 다 철저히 역사적이다. 도매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디자인-봉제-도매-소매의 수직 경로에 있어서 두터운 신뢰관계와 그로 인해 더 없이 저렴한 거래비용의 경쟁력은 전통 소농사회에서의 활발히 맺어지고 또 쉽사리 해체되기도 했던 각종 계의 원리와 흡사하다. 그렇지만 도매상 상호간의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단체는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다. 범람하는 짜퉁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인단체의 자율적인 법정이 가장 효과적이다. 부동산업자들에 의해 상가가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도 강력한 상인단체가 결성될 수 있다면 쉽사리 막을 수 있는 일이다. ‘피값’도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상인단체가 징수의 주체라면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또 생산적으로 재투자할 수도 있을 터이다. 이 모든 일에 동대문의 상인들은 무관심하거나 서툴기 짝이 없다. 요컨대 영세한 자본의 생계형 상인이 경쟁의 규범이 성립해 있지 않은 비조직 시장에서 단기적 수익을 위해 무제한의 출혈 경쟁을 벌리고 있음이 동대문시장의 현 주소이다. 앞서 세계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시장이 여전히 난장일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이 같은 시장조직적 특질에서이다.

IV. 독과점 공산품시장

고도성장기 한국의 공업화는 전통 공업의 재래적 발전의 경로가 무척 취약했다는 비교사적 특질을 보였다. 공업화는 위에서 대기업이 이식된 연후에 아래에서 중소기업이 산업연관적으로 배치되는 하향식의 경로가 지배적이었다. 그 때문에 주요 공산품의 시장구조도 일찍부터 독과점형이었으며, 그 집중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 이미 1966년에 상위 3사가 6할 이상의 비중을 점하는 독과점 업종은 전 산업의 69.5%에 해당하였으며, 1983년에는 74.8%로 피크에 달하였다. 마찬가지로 유통경로에서는 도매업의 분화와 발달이 미숙하고 상인자본의 축적이 빈약했던 역사적 조건에 규정되어 대기업 제조업체가 직접 유통을 조직하고 지배하였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유통경로가 다른 나라에서는 드물게 보는 전속대리점체제이다. 그것의 기원이나 발생과정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으나 대체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보인다. 1996년 현재, 음식료품 70%, 자동차 100%, 기성복 80%, 가구 70%, 가전제품 70%가 전속대리점체제에 속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1992년 전국적으로 4,700여 대리점이 있으며, 그 90% 이상이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3사에 속하고 있다. 종업원은 평균 4~5명의 영세한 규모이며, 3명 이하도 22.9%나 된다. 매장의 규모도 48.4%가 15~25평, 22.9%가 15평 이하의 영세점이다. 월매출액도 평균 5천만 원에 불과하며, 이에 전반적으로 가족 단위의 생계유지형 상인임에는 앞서 소개한 농촌 장사와 도시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전속대리점은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생산과 판매를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시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기타 광고효과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매장 확보에 드는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경제적 유인이 있다. 또한 대리점 측에서는 제조업체의 상권 조정에 의해 특정 지역의 수요를 독점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비교구매를 막거나 탐색비용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더구나 유통경로를 제한함으로써 건설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저해한다. 1996년 현재 중소기업의 78.5%가 OEM방식으로 대기업에 예속되어 있는 이유도 그만큼 전속대리점체제 하에서 독자적 판로의 개척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계열화도 이 같은 시장조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부작용과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법 상에서 전속대리점의 지위는 엄밀히 말해 합법적이지만은 않은 애매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현황 파악을 전제한 위에 전속대리점체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가설적이거나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다. 예컨대 삼보컴퓨터의 경우 동사 제품의 유통경로는 대리점이 60%, 용산전자시장 등 집단상가가 10%, 양판점이 10%, 직판점이 20%의 비중이며, 시장수요는 가정이 50%, 기업이 20%, 정부와 학교가 30%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대리점은 가장 큰 비중의 가정수요를 겨냥한 유통경로이다. 이 가정수요를 상대로 대리점이 경쟁력을 지니는 이유는 그 시장이 연고시장으로서의 특질을 강하게 띄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거리 상으로 가깝다는 이유 만에서 아니라, 신뢰할만한 인적 연망을 통해서야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는 구매습관에 의해 대리점을 찾는다. 컴퓨터시장에서 인적 연망의 신뢰성은 가격을 적당히 깎거나, AS가 쉽게 보장되거나, 보조 소프트웨어를 거저 지원 받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한편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5천만 원의 영세점포로서 지역시장에서 한 달에 최소한 15대는 팔아야 존속 가능한 처지에 있다.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대리점의 필사적인 마케팅이 지역사회 내의 동향이나 동창의 인적 연망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을 때, 수요의 연고주의와 결부되어 다른 어떤 대형 유통업체를 능가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공산품시장의 전속대리점체제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아 지역사회의 개인적 연망에 기초한 생계형 상인들의 대면·단골거래가 중앙 대기업에 의해 전국적으로 조직된 형태에 다름 아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림>

농산물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산품시장에서 탈세를 겨냥한 무자료거래가 광범히 성행함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조세연구원이 1993년 현재 자본금 1억원 미만의 150여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계산한 附加稅課標現實化率은 업종별로 제조업 80.5%, 도매업 54.9%, 소매업 54.5%, 음식 및 숙박업 30%, 건설업 45.6%, 운수창고 통신업 42.1%, 부동산임대 및 중개업 42.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0.1%이며, 전체 평균은 52.2%이다. 그러니까 전체의 대략 절반 정도가 무자료거래에 의한 매출 누락과 가공매입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공산품의 또 하나의 주요 유통경로를 이루는 이른바 집단상가도 따지고 보면 그 시장조직적 특질에서 난장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경쟁력이 생계형 전속대리점의 빈번한 도산 및 덤핑과 광범한 무자료거래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집단상가를 포함한 가전제품의 난장형 유통경로는 위의 그림과 같다.

V. 마무리

한국 시장경제에서 금융시장이 실질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1972년의 8·3조치 이후이다. 이어 1980년대에 들어 급성장하기 시작한 금융시장 역시 1997년의 경제 위기를 맞기까지 그 시장조직적 특질에서 난장이었다. 첫째, 정부에 의한 정책적인 금융자원의 배분이 시종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이자율이 균형 가격으로서 성립한 적이 없었다. 재벌=기업집단의 내부 금융시장도 비효율적이고 불건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제위기 이후에 밝혀진 바이지만, 주요 금융자원은 도덕적 해이와 배임의 은행가들과 그들에게 접속된 정경유착 및 賄賂의 연망에 의해 거의 배분되고 있었다. 위기 이전 노동시장의 난장상도 덜하지 않았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분배적 교섭을 둘러싼 갈등 증폭의 악순환 과정에 있었다.

1960년대초 경제발전의 의욕으로 가득 찬 발전주의국가가 청년장교들에 의해 성립하였을 때, 그 국가경제가 정부주도형의 발전모형을 취하게 되었음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당시까지 제대로 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은 아직 미성립 상태였다. 상품시장이라곤 생계형 상인들의 난장으로서 농촌 장시와 도시 재래시장이 고작이었다. 이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의 갭을 메우고 나아가 시장을 지배하였다. 관민간의 상향식 정보의 흐름과 상호 협조도 정부와 개인간에 자율적인 중간단체가 결여된 사회조직적 특질로 인해 성립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실패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것은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작용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될 수 있었음과 더불어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발생한 렌트가 수출실적과 연계됨으로써 정책지향과 그의 유인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덕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주도형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일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커지자 1980년대에 들면서부터 시장자율형의 대안적 모형이 조심스럽게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자유로워진 시장이 그에 합당한 자율의 의무를 다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계형의 상인들이 각축하는 조직되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법치와 사회의 공동체적 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선진적 규범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한국 시장경제의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문화적 전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위기의 극복이라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전통 그것에 이식되어야 할 선진적 규범을 들자면 저급한 평균주의와 대중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법치주의의 성립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법치만으로는 규범의 사회적 공백이 너무 크다. 그것들은 사회의 자율적이며 공동체적 편성이란 또 하나의 미덕으로 메워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 시장과 공동체의 비중은 늘고 정부의 비중은 줄어든, 그리고 각각의 실패가 상호 협조적 관계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정되는 선진적인 경제체제가 짜여질 것이다.